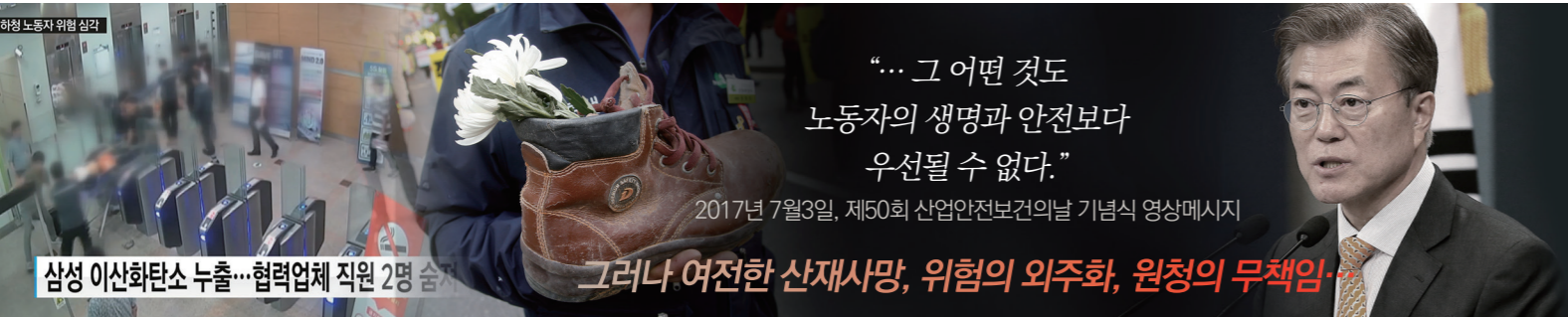




철도·지하철·발전소·원전·한전...
 위험의 외주화가 시민의 안전 위협
 가습기 살균제·라돈 침대...
 화학물질 영업비밀 남발이 시민의 생명 위협



“... 그 어떤 것도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보다
 우선될 수 없다.”

2017년 7월3일, 제50회 산업안전보건の日 기념식 영상메시지

그러나 여전히 산재사망, 위험의 외주화, 원청의 무책임...

위험의 외주화 금지·산재사망 처벌 강화·노동자 참여 확대!

노동자·시민·일터의
 안전을 지킵니다



“민주노총이 시민과 함께 하겠습니다!”



지금 국회가 해야 할 일은?

위험의 외주화 금지 산재사망 원청책임 및 처벌강화 산재예방 노동자 참여확대 입법!!

대형사고 때 마다 기업처벌법 제정하겠다고던 국회의원,
 18대·19대 국회가 발의한 관련 법안은 심의도 없이 폐기했습니다.

대형사고 때 마다 90도로 머리 숙여 사죄 퍼포먼스 하는 재벌 대기업,
 재발 방지대책 없이 언론대책만 넘쳤습니다.

유해화학물질로 직업병과 시민 피해 넘쳐나도
 기업이 영업비밀, 국가기밀 주장하면 만사형통
 위험의 외주화로 처벌도 책임도 빠져나가는 재벌 대기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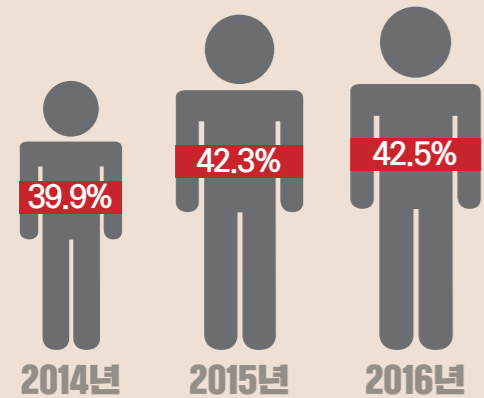


끝이 없는 하청 노동자 죽음의 행진,
 매년 2,400명 산재사망 이제는 끝내야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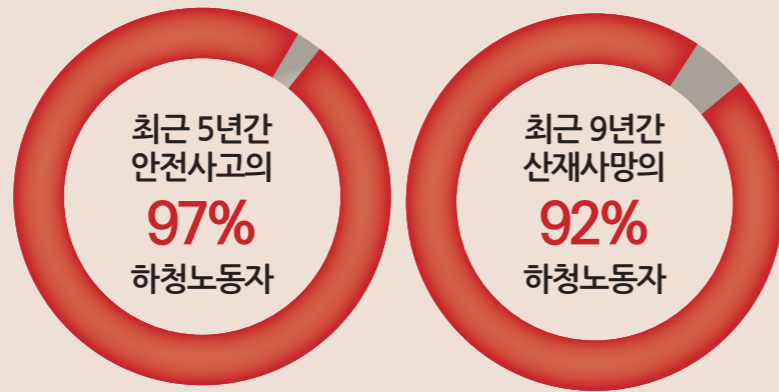
위험의 외주화 금지·원청책임 강화 입법으로 하청노동자 죽음의 행진을 멈춰야 합니다

진짜 사장 원청이 책임져야 OECD 산재사망 1위를 벗어납니다
산재사망, 원청의 책임과 처벌을
강화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하청노동자 산재사망 비율 해마다 증가 고용노동부



한국전력 5개 발전자회사 발전 비정규직 연대회의



깃털보다 가벼운 산재사망 처벌



2017년 STX조선해양 하청노동자 5명 사망에 벌금 2천만 원
2017년 구의역 스크린 도어 하청노동자 사망에
하청업체 대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원청 대표 벌금 1천만원 / 원청 서울메트로 공사기각

엄벌하는 다른 나라 산재사망 처벌



미국. 현대차 하청노동자 사망사고 벌금 약 30억 원 부과
영국. 대형 슈퍼마켓 체인업체 하청노동자 사망사고
벌금 약 37억 원 부과
영국, 호주, 캐나다는 '기업 살인법' 제정으로 산재사망 엄벌



하청으로 하청으로 고이는 위험!

화학물질 영업비밀 남발 제한 산재예방 노동자 참여가 시민의 안전을 지킵니다.



- 2015** 광주 남영전구 하청노동자 20여 명 수은중독, 4차 하청업체
- 2016** 홀로 구의역 스크린 도어 수리하던 하청노동자 사망(당시 19세)
야간선로 보수작업 하던 코레일 하청노동자 2명 사망(이들에게 통보되지 않은 '경주 지진에 따른 KTX 지연 운행')
삼성·엘지 핸드폰 부품 제조 하청노동자 7명 메탄을 누출 실명, 3차 하청에 불법파견
- 2017** 삼성중공업 거제조선소 골리앗 크레인과 타워크레인 충돌로 하청노동자 6명 사망
STX조선해양 화물운반선 내 탱크 폭발로 하청노동자 4명 사망
- 2018** 1월 포스코 포항제철소 질소가스 누출로 하청노동자 4명 사망
3월 포스코 엘시티 공사현장 안전작업발판 구조물 추락으로 하청노동자 4명 사망
5월 인천 남동공단 시안화수소 중독으로 청년노동자 사망, 업체는 5차 내지 6차 하청

영업비밀? 그냥 다~ 비밀!



삼성 반도체 직업병 사망 노동자 118명
영터리 화학물질 정보, 영업비밀 남발로
영문도 모른 채 죽어가는 노동자들
정부 보고제도, 영업비밀 사전심사승인이 필요합니다!

산재예방 노동자 참여확대 절실



노동자 참여 없는 위험성 평가, 진단, 사고조사로
기업은 면죄부, 기관은 돈벌이
하청노동자·학교·지자체 소속 노동자 등
산재예방 노동자 참여 적용 제외도 수두룩한 현실